

4당 대표 초청 회동

국회와 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필요. 국정 쇄신과 대선 수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으나 주어진 책무를 빠짐없이 해 나갈 것.

우선 대선자금 수사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지금 모두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대통령 주변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불리, 호불호를 떠나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이것을 멈출 수도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불거짐으로 시작되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라면 이러한 시련이 선순환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정치권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속이고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할 일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반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반성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데 동서고금에 진실한 고해성사는 없었습니다. 수사에 의해 진실이 규명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적극 협력하고 마무리 지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개혁과 정당문화의 개혁, 그리고 정치혁신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불법자금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10분의 1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모두 다 합심해서 그러한

성과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선량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선자금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명령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자기 한계선을 가게 하는 정도, 또 검찰이 합리적 판단을 하게 하는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경제부담 때문에 수사를 빨리 벗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치권이 출석이나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력하면 빨리 종결될 것입니다. 투명하게 털고 가면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측근 문제는 이미 특검법이 통과돼 있고 대선자금 문제도 머지않아 마무리되는 대로 시기가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회가 제안하면 대통령의 선거자금에 관한 특검을 받아 검증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선거자금의 규모가 한나라당 불법선거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으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공방을 합시다.

채신임 문제와 관련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부담과 책임정치의 취지를 고려해서 저나 저의 주변 수사가 마무리되어 진상이 밝혀지고 국민의 뜻을 살피서 최종 결단하겠습니다.

국정쇄신 관련의 정치공방에 시달려서 지도력이 흔들렸지만 정부의 책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각 문제는 할 때 하더라도 분명한 이유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장관 임기가 훨씬 긴 선진국과 과거 정부를 비교하면서) 대통령의 힘이 약할 때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단명장관을 양산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대화정국과 관련된 현 상황은 대통령의 뜻만으로는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총선 후 대선 관련 각종 수사가 종료된 후에 큰 틀의 대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때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